소도읍 도시계획 '확산형→압축형' 전환 시급

터미널 이전 등 지자체가 되레 공동화 부추겨

중심 시가지 활성화·무분별한 난개발 막아야

전남지역 소도읍 공동화는 농촌 지역의 연쇄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기관, 학원, 병원 등 서비스 시설이 몰려있는 소도읍이 몰락하면 덩달아 인근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고, 소도읍을 집중시키는 압축형도시(Compact City)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촌지역 연쇄 공동화 우려=소도읍에는 군청, 읍사무소, 교육청, 경찰서,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문화시설, 체육관, 도서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이 모여 있다.

최근 전남지역 소도읍의 이들 서비스 기관이 분산되고 교외로 이전하는 추세여서 소도읍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 군청에서 이들 서비스 기관의 평균거리는 무안읍 735m(1990년 470m), 진도읍 574m(〃301.7m), 장성읍 870m(〃857m)로 과거에 비해 멀어졌다. 소도읍 곳곳을 개발하는 과정에 공공시설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기존 도심에 위치했던 읍사무소, 지방법원, 금융기관, 경찰서, 터미널 등도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도시의 주택단지 개발처럼 일선 지자체들이 소도읍 주변의 임야나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탓이다.

■ 용도지역 과다지정 시·군

(단위:1인당 면적·㎡)

순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	무안	354.92	무안	51.90	무안	43.71
2	나주	348.79	함평	40.85	나주	41.05
3	함평	334.99	강진	31.85	장성	26.82
4	영암	244.13	영암	31.19	함평	14.7
5	담양	243.39	구례	29.66	해남	8.41
6	구례	193.59	나주	29.54	영광	8.02
7	강진	191.30	장성	26.92	영암	8.02
평균		48.17		5.97		2.69

이처럼 몰려 있던 서비스 기관이 흩어지고, 일선 지자체들이 한정된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소도읍의 외형만 키우다 보니 도넛처럼 가운데 부분이 텅 빌 수밖에는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인근 농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도읍 공동화로 기능이 축소되면 생활 서비스가 나빠져 더욱 많은 인구가 농촌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 방향전환=일본은 마치즈쿠리 3법을 통해 확산형 도시계획에서 압축형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소도읍 교외부의 대규모 집객시설과 공공시설, 개발사업을 억제해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한다는 조치다. 독일도 연방건설법을 대폭 개정해 기존 시가지를 집중 정비하고, 교외부의 난개발을 막고 있다. 외곽의 확장으로 도심부에서 진행되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소도읍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 지역은 확장형 소도읍 육성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무안읍은 334억원을 들여 ▲양파 한우·갯벌낙지 테마거리 ▲황토클리닉타운 ▲매일시장 ▲공항배후단지 등을 개발했고, 장성읍은 143억원의 예산으로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 ▲한옥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했다. 또 진도읍은 264억원을 들여 ▲관광약초타운 ▲철마광장 ▲무형문화재전수 교육관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소도읍 실태를 조사해 온 전남도의회 명품도시연구회는 무안읍의 공항배후단지 개발, 백로왜가리탐조지구 조성,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등의 사업이 소도읍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과 공동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장성읍 한옥문화체험과 진도읍의 약초타운 조성 사업 등도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품도시연구회 한 관계자는 "소도읍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확장보다는 집중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 시·도 갈등 번지나

전남 "전망타워 등 설치" … 광주 "현실성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립공원 무등산 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광주일보 8일자 1·3면〉등 개발방식을 놓고 맞서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남도의 무등산 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며, 10~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지시로 무등산 내에 518m 높이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자연사박물관과 탐방로 정비, 오토캠핑장 설치, 등산로 신설 등 무등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남도는 이날 '무등산 518m 타워 추진' 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는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에 설치된 흉물스러운 송전탑 6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만큼 전망타워의 설치 필요성과 위치, 규모, 경제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특히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가 이전되면 전망타워와 아시아문화전당을 레이저광선으로 이어 작품화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남산타워 및 케이블카와 같이 특별하고 기발한 상징물 설치를 고민해볼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전남도의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전남도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무등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추진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무등산 통신탑 통합 등 정상부 복원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전망타워와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은 시도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잘못된 개발사업은 행정력의 낭비와 갈등을 불러오고 지역을 분열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총 3200억원을 투입해 518m 전망타워와 각각 4㎞와 3㎞에 이르는 케이블카 2개 노선을 2017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을 담은 무등산 랜드마크 설치계획을 추진중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부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유지가 70% … 매입 않고는 효율적 관리 어려워

탐방객 크게 늘어 주차장·야영장 등 확충 시급

국립공원 무등산 5대 과제

❹ 사유지 매입·편의시설 확충

광주와 전남에 걸쳐있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면적은 ▲광주 북구 26.865㎢(35.6%) ▲동구 20.789㎢(27.6%) ▲전남 화순군 15.802㎢(21.0%) ▲담양군 11.969㎢(15.9%) 등 총 75.425㎢다. 이는 과거 도립공원 면적 30.23㎢의 2.5배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3.119㎢로 전체 면적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 중 경주(89.6%)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사유지 비율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무등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사유지를 하루빨리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광주시는 2013년도 국비에 일부 사유지 매입비용 50억원을 포함해 총 190억원의 무등산 사업비를 요청했으며, 이 중 100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환경부는 해당 예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설치 및 사무소 운영, 명품마을 만들기, 공원자원보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사유지 매입은 올해 사업비가 90억원이나 축소된 만큼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힌다.

실제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립공원의 품격에 맞는 무등산내 편의시설의 확충도 선행 과제다. 최근 국립공원 승격 이후 등산로나 편의시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등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원훼손 및 방문객 불편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등산의 탐방객 대부분이 광주 북구와 동구에 집중되면서 공원이용의 불균형과 특정 구간의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972억 원을 투입해 자연사박물관 1곳과 주차장 16곳, 탐방지원센터 28곳, 야영장 3곳, 오토캠핑장 2곳, 청소년수련시설 3곳, 휴게소 6곳, 자연학습장 3곳 132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지만, 예산이 걸림돌이다.

무등산이 진정한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녹색연합 임형칠 공동대표는 "국립공원 승격으로 무등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탐방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등산로 등 탐방시설은 도립공원 시절 그대로인 만큼 국립공원의 품격에 맞는 시설 확충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날日만평

- 김종두

벌써부터 자세가 떨어진다

www.ycc-green.co.kr

친환경 액상 제설제

1 환경표지인증
환경을 해치는 수입 염화칼슘, 소금의 제설은 이제 그만!
100% 국내산 원재료 사용으로 외화절약 500억원

2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품질관리단 시험결과 부식성(차량, 강재) 및 유해물질 불검출 합격판정
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직접 조달 구매가능

3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이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하는 탁월한 성능의 특허제품

제설제(S.K.O) 전남도로안전관리사업소 | 전북도로안전관리사업소 | 광주국도관리사무소 | 남원국도관리사무소 | 순천국도관리사무소 | 전남담양군청 | 전남무안군청 | 전남함평군청 | 전남장성군청 | 전남구례군청 | 전남영광군청 | 전남장흥군청 | 광주서구청 | 광주북구청 | 예산국도관리사무소 | 대구시시설관리공단 | 의왕시청 | 속초시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서울시중구청 | 서울시성북구청 | 서울시송파구청 | 경기도광명시청 | 경기도고양시청 | 경기도분당구청 | 대구시중구청 | 전주시덕진구청 | 대구시달성군청 | 그린케미칼 | 삼성전자 | 국회의사당사무처 | 서울대학교 | 남광토건 | 제이에이치개발 | 수원비행장 | 강릉군비행장 | 올림픽체조경기장

친환경녹색기업
(주)YCC (여천화학)
■ 본사공장 : 555-280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 11-1블럭 12구역
TEL : 061-691-6881~3 FAX : 061-691-6888
■ 서울지사 : 02-578-5656 ■ 부산지사 : 051-852-0582 ■ 대구지사 : 053-357-1122 ■ 광주지사 : 062-352-0091

(주)YCC여천화학 공장전경